

기 위한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향후 항만건설의 민간 투자자로서의 역할과 해운선사에 대한 신조선 및 중고선의 선박금융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선박 투자회사의 금융지원 및 정부 SOC사업 및 부동산사업 분야에서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명실상부하게 해양수산 전문은행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협은행은 지난 1월 해양투자금융부를 발족해 해양기획팀, 선박금융팀, 투자금융팀 등으로 해양금융 전문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명석 해양투자금융부장은 “수협은행의 해양금

융진출은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 대비 국내 상업금융분야에서 전문금융기관이 부재했다는 점, 향후 선박금융과 항만투자 사업 및 투자금융부분에서 관련 업계 회사들이 전문적인 금융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행은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일류 해양수산은행’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지난해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로부터 A3 신용등급을 획득, 국내 금융기관 중 최고의 신용등급을 받았으며 1,04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창사이래 최고 실적을 거두었다.

ILO 통합해사협약 비준검토반 구성운영

해양부, 통합협약 채택 적극 대처키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21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예비기술해사총회 후속 중간 작업반 회의’에서 통합해사협약의 채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비준검토반을 구성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해사협약은 각 분야별로 채택돼 있는 낡고 중복된 37개의 해사관련 ILO 협약을 하나의 통합된 협약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해 9월 열린 예비기술해사총회의 미해결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핵심쟁점 사항이 대부분 타결됐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자국항만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점검범위에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을 포함하고, 선원불만 처리를 위해 항만운영 당국자가 초기 조사 및 세부점검을 실시한 후 선내에서 불만사

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국으로부터 시정 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협약 요건에 불합치하고 선원의 안전·건강 또는 보안에 명백한 위해가 있을 경우 출항정지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협약의 적용범위 및 발효 요건 등에 대해선 합의도출에 실패, 추후 해사총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68개국·노사·비정부기구에서 253명이 참가했다. 통합해사협약 채택을 위한 해사총회는 내년 2월 제네바 국제노동기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해양부는 이번 회의에 대표단을 보내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설명했다.